



Business Focus

COP28 Review

UAE 컨센서스

(UAE Consensus)

December 2023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 02-2112-7095

E nkim15@kr.kpmg.com

엄이슬

책임연구원

T 02-2112-3918

E yeom@kr.kpmg.com

정미주

책임연구원

T 02-2112-4802

E mijujung@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COP27 경과	3
COP28 개요	4
COP28 주요 비전과 주제	6
COP28 주요 안건	7
UAE 컨센서스 채택	10
KPMG의 View	11

COP27 경과

지난해 개최된 COP27에서는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설립, 전 지구적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 선진국의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약속 이행 촉구 등을 골자로 한 합의 도출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p>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 이슈가 공식 의제로 채택 • 기후 변화에 따른 개도국의 경제적·비경제적 손실 비용을 선진국이 '보상' 하는 신규 기금 조성기구 설립에 합의
<p>전 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을 설립하여 2년간 전 지구적 적응에 대한 평가지표 및 방법론 개발
<p>선진국의 기후재원 약속 이행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에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Climate Finance) 조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촉구¹⁾

COP27 합의안 이행 경과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위원회(개도국 대표 14명·선진국 대표 10명으로 구성)가 설립되어 '23년 3월부터 기금의 제도적 장치, 상세한 내용과 절차 및 운영방안 논의 시작 • 전환위원회에서 논의된 기금의 세부 운영계획은 COP28에서 발표하고, COP28 개막식 때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의 공식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27 이후 4차례의 워크숍 실시하여 전 지구적 적응 목표(GGA) 달성과 진행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GGA 프레임워크 초안은 COP28에서 공개되어, 파리협정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될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의 6차 평가('23.11)에 따르면 선진국이 개도국을 위해 제공하고 동원한 총 기후재원은 '21년 896억 달러로 전년대비 8% 증가한 수치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COP1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COP21에서 이를 2025년까지 연장

Source: IEA, OECD, UN Climate Chang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UN Climate Change 페이지 내 '23년 12월 12일 검색 기준

COP28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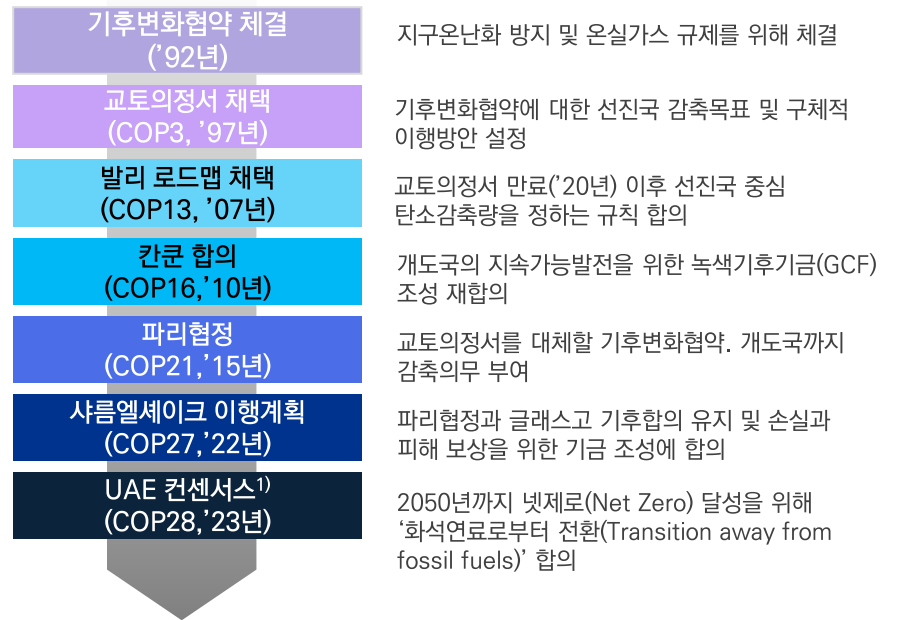
'23년 11월 30일~12월 13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은 파리협정에 대한 이행현황 평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 등을 논의하여 최종합의문을 채택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항목	내용
장소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Dubai, United Arab Emirates)
기간	- 2023년 11월 30일 ~ 12월 13일 (정상회의 : 12월 1일~12월 10일)
참가 규모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198개국) 정부 대표, 금융 및 경제계, 기후, 종교계 관련 인사 등 10만여 명
주요 의제	- 파리협정 이후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 발표 -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 퇴출·감축 합의에 대한 논의 - 기후 변화의 영향을 인한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 방안 검토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돕는 기술 개발 및 확산 방안 논의 - 탄소 감축 기술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행동 방안 도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주요 기후변화협약 진행경과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23.12.13 기준, 대표결정문이 UNFCCC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주요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대표결정문의 이름은 가제로 기재

[참고] COP27 이후 COP28 까지

COP28을 앞두고 파리협정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에 대비하고 에너지 전환 가속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후 금융 변화 등을 논의하는 각국 정상회담 개최

COP28까지 주요 마일스톤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

Note 2): Africa Union

COP28 주요 비전과 주제

COP28 사무국이 참가국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COP28은 1)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2) 기후 금융 변혁, 3) 자연·사람·생명·생계 중심의 기후 행동, 4) 역대 가장 포용적인 COP를 목표로 적응과 회복 (Adaptation and resilience)을 비롯한 총 16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

COP28 주요 비전

'30년까지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Fast-tracking the energy transition and slashing emissions before 2030

기후 금융 변혁을 위한 약속 이행과 새로운 협약 틀 마련
Transforming climate finance, by delivering on old promises and setting the framework for a new deal on finance

자연·사람·생명·생계 중심의 기후 행동
Putting nature, people, lives and livelihoods at the heart of climate action

역대 가장 포용적인 COP 지향
Mobilizing for the most inclusive COP ever

Source: UNFCCC(2023.07 COP28 사무국이 참가국에 보낸 서한)

총 16가지 주제를 논의한 COP28



Source: UNFCCC 홈페이지

COP28 주요 안건

COP28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 ‘감축’, ‘적응과 회복’, ‘기후 테크’ 분야에서 각국의 NDC¹⁾ 이행 점검 평가 후 행동 방안 도출,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감축 합의에 대한 논의,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 검토, 탄소 감축 기술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행동 방안 도출 등이 세부 안건으로 상정

COP28에서 주목해야 할 4가지 주제와 세부 안건

1 전 지구적 이행 점검 (Global Stocktake, GST)	2 감축 (Mitigation)	3 적응과 회복 (Adaptation and resilience)	4 기후 테크 (Climate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이후 각국의 NDC¹⁾ 이행 점검 현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5년마다 NDC 달성을 위해 국가별 감축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 • GST 기반 기후 행동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 도출, 기후 행동을 위한 기회 발굴, 벤치마크 사례 공유,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물 극복 방안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 퇴출 또는 감축에 대한 각국 입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화석연료 퇴출 또는 감축 안’을 합의할 지 당사국 간 논의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사용 촉구, 원자력·수소·탄소 포집과 같은 화석연료 대체 방안,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에 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보상에 당사국 합의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러운 기후 변화가 아닌, 극단적 기상현상,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이 발생하며 자연과 사람에게 주는 악영향을 보상하는 것 논의 •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마련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공여국)·개발도상국(수혜국) 그룹의 구성, 기금의 강제성 여부, 기금의 규모 등 결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돕는 기술 개발 및 확산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 이전 또는 해당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함을 명시했으며 관련 방안 논의 • 탄소 감축 기술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행동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다배출 산업(철강, 시멘트 등) 공정 관련 저탄소 기술 개발, 국제표준 형성 등 협력 방안 필요

Source: UNFCCC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ote 2):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COP19에서 합의된 바르샤바 메커니즘은 기후변화 적응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고, COP27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보상하기 위한 ‘신규 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당사국들이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자원 조달에 대한 방안 마련은 마련된 바 없어 COP28에서 논의 진행

COP28 주요 안건 - 논의사항 (1/2)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시행됨에 따라 파리협정 내 지구 평균기온 1.5°C 상승 제한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을 평가한 첫 번째 성적표가 발행됨. 한편, 한국을 포함한 12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확대하기로 약속

1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협정 내 지구 평균기온 1.5°C 상승 제한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을 형평성과 과학에 근거하여 평가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GST 결과문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산유국들의 반발 존재 탄소 예산에 대한 공평한 분배, 메탄 등 비 탄소 온실가스 감축과 과도기 연료의 중요성 언급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당사국은 GST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제7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¹⁾ 전에 2035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NDC²⁾를 제출해야 함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미흡. 즉,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에는 각국의 이행 노력이 부족

Source: UNFCCC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CMA(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는 파리협정에 따라 NDC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COP와 함께 개최됨
 Note 2):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하기로 합의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가 주도하고 유럽연합, 미국, 한국 등이 참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고, 매년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끌어올리는 데에 동참하기로 약속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의 현재 정책목표와 COP28의 모든 합의사항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가정하면 2030년 기준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4Gt CO₂eq로 기대¹⁾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EA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134Gt CO₂eq으로 기대효과는 넷제로에 필요한 수준의 30%에 불과

Source: UNFCCC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IEA의 COP28 서약 실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23.12.10)

COP28 주요 안건 - 논의사항 (2/2)

COP27에서 첫 공식의제로 채택되었던 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세부 시행 합의안이 채택되면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 출범. 아울러 탄소 저감이 어려운 산업에서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자 ‘기후 클럽(Climate Club)’ 출범

3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손실과 피해 대응책 마련

4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산업 등 개발도상국 탈탄소화 지원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 출범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개발도상국이 겪는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세계은행(WB)이 4년간 임시로 운영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E, 독일, 영국, 미국, 일본, EU 등은 개발도상국에 재정 지원 폭풍, 홍수, 해수면 상승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생명·생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자원 형성에는 성공하였으나, 향후 기금 조달 방식·이행 방안 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미정 기금 규모¹⁾가 실제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보상에는 부족

Source: UNFCCC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UAE-독일 각각 1억 달러, EU 1억 4,500만 달러 등 기부 예정이며,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목표(2023.12.08 기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 저감이 어려운 산업에서 개발도상국들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후 클럽’ 공식 출범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량 측정 보고 메커니즘 강화, 탄소누출 완화 등 회원국 간 정책 효율·연계 강화 탈탄소화 위한 방법론 및 부분별 전략 개발·조정, 녹색산업 제품 시장 확대 선진국, 개도국, 신흥경제국 간 산업 탈탄소화 지원 협력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상호인정, 국제표준 형성 등을 통해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 제로에 가까운 배출량 달성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으로 최저 탄소가격제나 국제 탄소가격제 등의 목표 제시 여부는 불투명 주요 탄소배출국인 중국, 인도 불참 기후 클럽의 재정 규모 및 관련 자원 미발표

Source: UNFCCC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UAE 컨센서스(UAE Consensus)¹⁾ 채택

최종합의문 주요 내용

COP28 당초 폐막일(12월 12일)을 하루 넘긴 12월 13일 오후 4시경 (두바이 현지시간 기준)에 최종합의문을 채택하고 폐막

-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
파리협정 내 지구 평균기온 1.5°C 상승 제한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을 평가한 첫 번째 성적표 발행
-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10년 안에 정의롭고 질서정연하게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확대하며, 배출가스 저감이 미비한 석탄 화력발전소 신속히 폐기 및 신규 허가 제한
- 클린 테크(Clean Tech) 개발의 가속화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산업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¹⁾) 등 클린 테크 개발의 가속화 강조

최종합의문에 대한 코멘트



술탄 알자베르 COP28 의장(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CEO)

"세계 최초로 (기후 관련)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문구가 포함됐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비로소 기후위기가 화석연료로 인한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이정표", "이는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준이자 진작에 이뤄졌어야..."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이번 합의는 화석연료 종말의 시작", "당사국은 모든 내용에 빠짐없이 동의하고 파리 협정을 이행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스테판 코벨리우스 박사 세계자연기금 기후변화 전문가

"석탄·석유·가스의 단계적 퇴출을 촉구하는 데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2023.12.13 기준, 대표결정문이 UNFCCC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주요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대표결정문의 이름은 가제로 기재

Note 2):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KPMG의 View (1/2)

COP28 최종 합의 결과와 한국이 주도·동참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종합할 때, 국내 산업은 NDC 상향 조정 필요 시 탄소배출비용 부담 증가, 원자력 및 수소 산업 육성 정책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확대, 탄소 다배출 산업별 탈탄소화 방안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더해지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COP28 주요 합의 결과

-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시기인 2030년까지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가속화 필요
- 2030년까지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
- 배출가스 저감 미비한 석탄화력발전소 신속히 폐기
- 손실과 피해 기금 기구 공식 출범 및 UAE, 독일을 중심으로 약 7억 달러 이상의 기금 약정
- 탈탄소가 어려운 산업부문 정화를 위한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기술 개발

한국이 주도·동참한 주요 이니셔티브

- 무탄소에너지(CFE¹⁾) 이니셔티브
 - 정부 주도로 CFE 활용 확대 방안 제시
 -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수립, 주요국 정부·국제 에너지 협의체·민간부문 동참 유도 등이 향후 과제
-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및 연평균 에너지 효율 2배 증가를 위한 이니셔티브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1,000GW로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매년 4%씩 개선하는 것이 목표
- 다자간 탄소중립 협의체 '기후 클럽' 참여
 -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중점 추진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NDC 상향 필요 시 탄소배출비용 부담 증가
 - 국내 NDC가 상향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별로 할당되는 탄소 감축 목표도 증대
- 원자력·수소 산업의 정부 차원 지원 증대
 - 국내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한 원자력, 수소 산업 육성 정책 제시할 가능성 존재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대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 수정 및 향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필요
- 탄소 다배출 산업별 탈탄소화 방안 촉구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화학 등 전통적인 산업뿐 아니라 반도체 등 전력수요가 높은 산업에서도 탈탄소화 방안 마련이 시급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Carbon Free Energy로 재생에너지만 인정하는 RE100 이니셔티브와 달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과 청정수소 등을 포함

KPMG의 View (2/2)

국내 기업은 탄소배출비용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NDC 상향 조정·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추가 지원이 가능한 무탄소에너지(원자력, 수소 등)의 차세대 기술 개발 및 글로벌 표준 형성에 집중하며, 재생에너지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시장 기회를 발굴하면서 탈탄소 기술 개발을 위해 독자·협업 전략 병행 필요

국내 기업에게 미칠 영향은?

<p>1</p> <p>NDC 상향 조정 필요 시 탄소배출비용 부담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 2억 9,100만 톤 감축 필요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통해 각국의 NDC가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경우, 국내 역시 현재 기준의 감축 목표에서 일정 수준 추가될 것으로 예상
<p>2</p> <p>원자력·수소 사업 대상 정부 차원 지원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산업부, 대한상의 및 기업을 중심으로 '무탄소에너지(CFE) 연합' 발족하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 및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오픈 플랫폼화 목표 국내 원전 기술·수소차·수소연료전지 시장이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
<p>3</p> <p>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반, 2030년 기준 전력Mix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 이는 2021년, NDC 상향 과정에서 조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일정 수준 하향 조정한 것. 그러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3배 확대 서약에 동참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예상
<p>4</p> <p>탄소 다배출 산업별 탈탄소화 방안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철강·석유화학 등 4대 탄소 다배출 산업은 2050년까지 1.2억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술개발 협약 체결했으나, 국제 사회는 국내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이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기후 클럽 서약으로 인해 부담이 증대될 전망

전략 수립 방향성

- NDC 상향 조정 시나리오뿐 아니라 향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대, 주요 수출 시장 내 탄소 관련 비용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필요
- 2023년 1월 정부는 원전·수소 등 에너지 기술개발에 1.2조 원 투자 지원책 발표
- 차세대 기술 글로벌 표준 형성 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R&D 대응 필요
- 국내 발전설비 추가 수요 및 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완화 등 정책적 지원 가능성 고려
- 미국 IRA¹⁾ 등 재생에너지 사용 시 정책 지원 사항 고려하여 각 사 공급망 전략 재검토
- 주요 시장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탈탄소화 요구에 부응하고 저탄소·무탄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독자적 개발뿐 아니라 국내외 기업과 적극 협업 고려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

[참고] 기업의 추가 고려사항 - COP28에서 확인된 ISSB 저변 확대

국내 기업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ISSB 공시기준이 다양한 기업·규제당국·기관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ISSB 공시기준을 기초로 한국형 의무화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으므로 기업은 공시기준에 대한 자사의 Readiness 진단을 토대로 데이터 관리 체계·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갖추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

ESG 정보공시 기준으로서 ISSB¹⁾ 지지 확대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FRS 재단이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대한 글로벌 기준점을 제공하고자 설립한 위원회
- 국내 규제당국은 ISSB 공시기준을 기초로 한국형 ESG 의무화 공시기준을 만들기 위해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3년 1분기에 공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

COP28에서 ISSB 공시기준에 대해
400개 이상 기관이 지지 표명

기업	투자자	증권거래소	은행	규제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연합 지지 선언 서명 • ESG 공시 준비 중인 140개 이상의 기업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자산 규모가 120조 달러 수준인 투자자 그룹 및 70개 이상 기관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증권거래소연합 (27개 거래소) • 아랍자본시장연맹 (17개 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부흥개발은행 • 유럽투자은행 • 미주개발은행 • 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 등 • 다자개발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EU) • 영국 • 아세안 회원국 • 캐나다 • 독일 • 일본 등

국내 기업의 ESG 정보공시 대응 전략

- 공시기준에 대한 각 사의 Readiness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
- ESG 정보공시에 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R&R 정립
- 공시 데이터 관리 체계화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기업 전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참고 (QR코드 스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S1은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공시를 위한 일반원칙 등 일반사항을 다루고 있고, S2에서는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재무영향분석, 기후 회복력에 대한 공시가 포함됨



Business Contacts

ESG 비즈니스 그룹

ESG 전략자문

이동석
부대표
T 02-2112-7954
E dongseeklee@kr.kpmg.com

문상원
상무
T 02-2112-6513
E sangwonmoon@kr.kpmg.com

ESG 정보공시/인증자문

김진귀
부대표
T 02-2112-0223
E jinkwikim@kr.kpmg.com

황정환
상무
T 02-2112-0462
E jeonghwanhwang@kr.kpmg.com

손민
상무
T 02-2112-3036
E minson@kr.kpmg.com

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